

: 식민 국어에서 세계 언어로 :

1. 황국 식민화 정책과 조선어

조선조 후기 양반과 상민들이라는 이분법적 계층 구도의 모순과 한문과 언문諺文이라는 소통 양식의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되는 혼란 속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일제 식민지화는 이러한 암흑을 뚫고 새로운 근대성의 판타지로 다가설 수 있는 충분한 무대 장치가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황국 식민화 정책의 서막이 된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로 일체 단결하는 것이 지상 과제였다. 지방을 배회하던 무사들의 불평과 불만을 식민 제국 건설의 선봉자로 투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아시아 신제국주의 건설의 꿈은 하나씩 열매를 맺었다. 무사 계급인 낭인들은 유럽을 모델로 하는 일본 근대화의 꿈과 중상주의를 상품으로 하여 아시아의 내면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그들의 국가주의의 상징이 바로 ‘국어國語’와 ‘국자國字’였다. 발 빠르게 동경을 중심으로 한 말씨를 표준어로 상정하고 동아시아의 선민으로 자처하면서 그들의 근대화의 발전 모델을 식민 국가에 이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한문 문화권에 젖어 있던 조선은

일본의 근대화적 모델을 거부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까지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추단을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 당시에 한문체에서 순한글 문체로의 전환을 사회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대 변혁이 아닐 수 없다.

순한글 문체로의 전환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일은 한글 표기와 정서법의 통일을 위해 언어를 표준화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표준어 제정의 원리를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수탈에 대한 비판과는 무관하게 서울 중심의 표준어 정책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수용되게 되었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한글 운동이 민족 구국운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비판없이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 한글 운동이 나라찾기 운동인 동시에 식민지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이데올로기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국어 운동은 곧 민족 운동이며 절대적인 선물이었다는 인식의 한계성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초기,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계몽적인 국어 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논의와 일치했다. 곧 식민 시대의 국어 운동가들은 일제식 근대화의 방식으로 국어의 표준화 정책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전제되어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근대화 시기는 다양한 통합적 이데올로기가 창출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전근대의 문물과 제도, 인간관계와 사회 제도 등으로부터 새로운 식민지적 문물과 제도, 사회 제도와 인간관계가 새롭게 조형되던 시기이다. 그런데 식민지배자인 일본의 근대화와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가 이질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매우 유사한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을 걷고 있다. 당시 상층부의 지식인 다수가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배 방식으로서의 국가주의·민족주의와 식민 저항으로서의 국가주의

· 민족주의는 다의적 개념으로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 엘리트 층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합치되었으며, 이러한 기반이 근대를 장식하는 중요한 계몽적 수사학이 될 수 있었다. 지방의 토호 지배 권력의 종말과 더불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지배자 일본의 '지배' 목표와 기존의 사회 제도와 가치를 무너뜨리고 근대화로 나아가려는 피지배자 조선의 '저항'이라는 욕망이 일치하였다. 조선의 그 욕망의 표현은 민족주의라는 양상으로 일본의 식민지에 대항하는 조직적 힘으로 발휘될 수 있었다. 그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국어(한글)'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문 소통의 구조에서 한글 소통 구조로의 일대 혁명적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 초창기에는 '국어'의 자리에 일본어와 조선어가 개별화된 표상으로 부상했지만 곧바로 일제의 식민 지배 방식으로 내선일체의 국어, 선민화된 국어는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일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선민화의 이면에 타자화된 조선은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미개한 민족이라는 관념으로 표상화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야만의 조선에서 선민인 일본 사람들의 국어인 일본어로 조선의 국어의 대상을 교체하는 식민 지배 언어관을 확고하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식민주의 언어 포식을 반대하는 운동이 한편으로는 계몽의 수단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해방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글 운동을 통해 근대화와 민족 자주를 실현하려고 했던 민족 지도자들은 자연히 반식민주의적 항일 인사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근대화의 바람을 타고 일본의 표준어를 그대로 근대적 국민주의의 상징으로 복제한 조선의 표준어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일까? 식민 시대의 표준어 정책은 활자 매체인 신문을 중심으로 한 저널리즘과 보통학교 교육, 기독교 성서의 번역·보급 사업과 결탁함으로써 새로운 계급의 내부와 외부의 준별하는 경계가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유럽과 미국 유

학파들이 자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국자國字 운동이 조선조 사회의 위계와 구조를 깨고 새로운 근대화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명백하다.

당시 소통 체계였던 한문에서 한글로의 이전이라는 문화 변용은 일제 식민지화, 즉 국가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무게가 실린 역사적 변화임을 알아야 한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일제가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이어서 1937년 중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책략을 일대 전환하게 되었다. 한반도를 침략하여 주권을 절멸시킨 다음 경제 수탈과 함께 민족 언어와 문자를 비롯한 민족 문화와 역사를 말살시키려는 황국 식민화皇國植民化 정책이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 총독인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취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37년 3월 일본어 사용 강화에 대한 통첩이 내려지고, 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시행(1937년 10월), 일본어 강습소 전국 설치(1938년 1월), 창씨개명 실시(1940년 2월), 신문 등 게재 제한령(1941년 1월), 초등학교규정 공포(1941년 3월),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 폐간(1942년 5월) 등 조선어 말살 정책이 강화되었다. 1942년 제8대 조선 총독으로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임명되자 조선어학회 사건(1942년 10월), 진단학회 해산(1943년 9월), 조선교육령 제4차 개정(1943년 5월) 등의 정책을 통해 황국 식민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고은(2007)은 일제의 언어정책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초기에 조선의 물질적 주체를 탈취하는 것으로 식민지 정책을 진행했다. 그래서 조선의 언어와 문자는 일단 자치의 대상으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주체를 상실했을 때 그 주체를 대행하는 것이 서술 주체라는 사실과 그 서술 주체가 언젠가는 없어진 주체를 복원하는 힘의 문화적 동력인 사실도 확인되었을 것이다. 민족을 정의하는 데 먼저 그 민족의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다면, 식민 통치의 광기로는 조선어와 문자는 마땅히 제거해야 할 마지막 주체의 유산이었다. 이같은 조선어 말살 정책과 함께 강행된 것이 창씨개명이다. 모든 조선 사람의 조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식민지 조선을 일본화하는 핵심이었다. 이광수는 스스로 일본 이름으로 바꾼 뒤의 기쁨으로 글을 썼다. ‘초등학교 1학년인 내 이름은 다카바야시 도라스케高林虎助였다.’

언어가 인간의 주체 기호화라는 사실은 식민지에서의 모국어가 어떻게 모독당하는가를 말해 주는 것과 아울러 언어 자체가 인간 존재의 고향이라는 사유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일제는 1931년을 전후하여 조선어와 한글의 사용과 교육을 저지시키고 대신 일본어 보급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조선어와 한글 말살 정책과 함께 일본어 상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38년 3월 3일 제3차 ‘조선 교육령’에 조선어 과목을 초중등학교에서 수의과목隨意科目으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수업 시수도 대폭 줄였다. 그리고 1941년에는 ‘초등학교 규정’(1941년 3월 31일)을 공포하여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사라지게 함으로써 교육 제도상에 조선어말살 정책을 완결하게 되었다.

일제가 식민 초창기 근대화의 표본으로 조선에 그들의 이념을 이식하려고 했을 때에 조선 지식인들이 그들의 구박을 깨고 근대화로 이행하려는 목표와 일치함으로써 ‘한문’에서 ‘한글’로의 문자 체계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었지만, 그 한글 운동가들이 추구한 민족주의적 탈식민주의의 성향을 깨달은 일제는 문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라는 3대 기관지를 틈만 나면 폐간시키려고 노력하여 동아와 조선중앙을 1936년부터 무기한 정간시켰다가 1937년 6월 2일 동아만 복간되었다. 이와 함께 1940년 1월에는 총독부 기관지 성격인 매일신보에 동아와 조선을 매수 통합시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40년 8월 11일 경리부정 사건을 빌미로 하여 동아와 조선은 자진 정간

형식으로 폐간되었다. 1941년에는 『문장』, 『인문평론』 등 각종 잡지들도 폐간되자 공식적으로 조선어로 된 신문이나 잡지는 한 가지도 남지 않게 되었다.

조선어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학회’를 탄압 해체하였으며 동 기관지였던 『한글』을 1942년 3월에 폐간시켰다. 1942년 9월 조선어학자 정태진을 구속하고 같은 해 10월 1일 『조선말큰사전』 편찬위원인 이극로, 정인승, 이운재 등 11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1942년 10월 21일 이만규, 이병기 등 7명을 추가 체포하였고, 12월 23일에는 3차로 윤병호, 전인섭, 안재홍 등 8명을, 1943년 3월에는 김도연, 서민호 등 2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조선어학회 회원을 체포 구금하여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동시에 『조선말큰사전』 원고 3만 2천 장과 20만 장의 어휘 카드를 압수하였다.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구속 수감하는 죄목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었는데 당시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건 조선어학회는—소화 6년(1931년) 이래로 피고인 이극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 운동 가운데 그 기초적 운동인 어문 운동을 취하여 그 이념으로써 지도 이념을 삼아 표면으로 문화 운동의 가면 아래 조선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 단체로서, 본건이 검거되기까지 10여 년의 장기에 걸쳐 조선 민족에 대해 조선 어문 운동을 전개하여 온 것으로서, 시종 일관 진지하고 변함없는 그 운동은 조선 어문에 쏠리는 조선 인심의 동향에 잘 맞아서 그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조선 어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일으켜서 다년간에 걸쳐 편협한 민족 관념을 배양했으며, 민족 문화의 향상, 민족 의식의 양양 등 그 기도한 바 조선 독립을 위한 실력 신장의 수단을 다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조선어학회는 이리하여 민족주의 진영에 단연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며, 저 조선 사상계를 휩쓰는 공산주의 운동 앞에 엎드려 아무 하는 일 없이 또는 자연 절멸 또는 사교 단체로 떨어져 겨우 연명·보존하고 있는 민족주의 단체 사이에서 오직 민족주의의 아성을 사수하는 것으로서 증시되기에 이르렀다. 아래와 같은 사업이 어느 것이나 다 조선어신문의 열의 있는 지지 아래 조선인 사회에 비상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 가운데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 같은 것은 역사상의 민족적 대사업으로서 촉망받기에 이
르렀다.”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활동이 표면으로는 문화 운동을 가장하여 조선 독
립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하고, 조선어학회를 10여 년의 장기간
에 걸친 조직적 독립 운동 단체로서 조선인들의 일관된 민심으로 편협한
민족 관념을 배양하는 데 기여한 불법 민족주의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선어 편찬 사업을 민족주의적 대사업으로 조선인의 관심을 끌어 모
은 불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제와 우리 선각자들의 꿈의 환영이 근대화라는 점에서 일치하였지만
향구적인 목적에 있어 식민과 독립으로 각각 달랐기 때문에 끝내 결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민족 언어는 회복하게 되었지만 상흔처럼
남은 것이 있으니 서울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의 준거였다.

2. 사투리의 눈물

188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신구약 성서 번역에서 사용한 철자법과 1912
년, 1921년, 1930년 세 차례에 걸쳐 ‘조선어철자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언문철자법이 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1, 2차
언문철자법은 표음중심의 철자 표기안이었으나 3차 개정 시에 장지영, 권덕
규, 정열모, 최현배, 신명균 등이 가담하여 형태주의 철자법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주시경 선생이 제안한 국문연구소 의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어 규범화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조선어연구회(조
선어학회)를 중심으로 1930년 12월 13일부터 1933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1930년 12월 13일 12명의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위원회(권덕규, 김윤

경, 박현식, 신명균, 이병기, 이희승, 이윤재, 장지영, 정인섭, 최현재, 정열모, 이극로)를 구성하여 2년간 심의를 거쳐 1932년 12월에 맞춤법 초안을 완료하고 1932년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제정위원 6명(이만규, 이세정, 이상춘, 이탁, 이갑, 김선기)을 추가로 증원하였다. 1932년 12월 26일에서 1933년 1월 4일까지 개성에서 1차 독회를, 1933년 7월 25일에서 8월 3일까지 화계사에서 2차 독회를 거쳐 65항목 및 부록 9항목을 확정하였다. 1933년 10월 19일 조선어학회에서는 임시총회를 열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완성하였다. 총 433시간에 12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오늘날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원안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3년 10월 29일 오후 5시 30분 한글날 기념식에서 최종 발표하였다.¹⁷

조선어사전의 올림말로 올릴 표준어를 제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차대한 과제였다. 1934년 12월 이윤재, 최현재, 이희승이 중심이 되어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73명으로 구성된 사정위원은 1935년부터 1936까지 활동하였다.¹⁸

전등어와 각립어 가운데 전등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장 세력 있는 방언을 선택하고 각립어 또한 음운론적 분화형 가운데 역사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그 세력권을 고려한 조선어 표준말 선정 원칙을 정하였다.

1935년 1월 2일~1월 6일까지 온양온천에서 제1회 독회를 열었으며 수정위원 16명을 선정하여 세부적인 수정을 거쳤다. 1935년 8월 5일~8월 9일까지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봉향각에서 2차 독회를, 1936년 7월 30일~8월 1일까지 인천 제일공립보통학교에서 제3차 독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용어를 보완하기 위해 이덕봉, 정문기, 송석하 등을 고문으로 선임하였

¹⁷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참고.

¹⁸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완성 과정과 세부적 활동상화에 대해서는 박용규,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사』, 한글학회, 2013. 참고.

으며, 특히 3차 독회 이후 수정위원이 중심이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안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기관, 문필가 등 500여 곳에 보내어 사정안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 1936년 10월 28일 한글날 기념식(490주년)에서 「조선어 표준어 사정안」을 최종 발표하였다. 표준어 6,231개, 약어 134개, 방언 3,082개, 한자어 100개로 사정 낱말 수는 총 9,547개였는데 그 후 조선어학회에서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라는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국가의 언어 관리의 한계를 경북 안동 시골 할머니의 풍자적인 말로 표현하면 “내 말도 국가가 관리하니껴?”라고 풍자하고 있다. 우리말과 글은 표준어라는 갇힌 상자 속의 언어가 아닌 은유의 구름(담화적 의미)과 같은 것이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일은 언어의 통일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거나 상황 분석에 열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계나 학술 단체는 언어 소비자들의 말과 글을 통합적으로 가름하는 데 협업해야 할 것이다.

근대 한국어의 이상은 규범주의에 바탕을 둔 사전과 문법에 우리말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일이 그 당시 당면과제였다. ‘조선어학회(한글학회)’가 추진했던 우리말큰사전 사업과 더불어 어문 규정의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어는 서울말이어야 하듯이 독일어라면 독일 수도의 한 변이형만을 골라 「한 나라의 언어이어야 하고, 모든 독일 사람은 그들만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했듯이 언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강박의 결과물이다. 조선조 500년 우리말을 잡초처럼 너무 오래 방치해 두었던 결과이다. 언어의 변이를 사회 통합과 애국심에 반하고 국가와 민족에 반하는 경멸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일제 식민 강점기 하에서 만들어 낸 결과이다. 실제로 국어학자들이 호들갑을 떠는 만큼 규범과 문법 부재의 오랜 동안 우리의 말과 글이 이처럼 혼란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시대에 민간 학술 단체가 이끌어 온 우리말의 규범화와 큰사전 편찬

사업의 노력을 국가가 회수한 뒤에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견고하게 갇힌 언어 상자를 만들었다. 규범주의자와 그들에게 대료된 학자들은 서울 언어는 ‘옳고’, 지방의 언어는 ‘그름’으로 편을 갈라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법령집(문법과 사전)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당시 환산 이윤재와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한국어의 지리적 계층적 변이형을 최대한 사전에 담기 위해 환산은 ‘전등어(어원 분화형)’와 ‘각립어(음운 분화형)’라는 개념을 만들었으며¹⁹, 외솔은 비록 제한적인지만 『시골말 캐기 잡책』을 만들어 언어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제한된 시간과 자본의 부족으로 그들의 이상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마치 국어를 법령처럼 규제하고 한자에 대한 사대주의와 영어의 나라로 바꾸려는 배타적 언어관을 지닌 이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방언이나 신조어, 전문용어, 외래어 등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언어 자원의 관리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이 아닌가?²⁰

국어 정책은 한글로 삶의 그물을 짜는 모든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그 중요함에 대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국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언어로 표현되는 다양한 지식관리 영역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어 정책의 방향 설정과 그 운용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어

¹⁹ 이윤재,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내용」, 『한글』 제4권 제11호, 1936. 「표준어를 될 수 있으면, 전 조선 각 지방의 사투리를 있는 대로 다 조사하여 여기에 대조하여 놓는 것이 몇몇한 일이겠으나, 이것은 간단한 시일에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일뿐더러, 분량이 너무 많아 인쇄에도 곤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리 못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여기에 유어로 대조한 것은 다만 서울에서 유행하는, 즉 서울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쓰는 서울 사투리만을 수용함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사투리 전부를 조사 수집하는 것은 이후 별개의 사업으로 할 작정입니다.」

²⁰ 국립국어원에서 물론 지역어조사사업, 생활용어조사사업 등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대중의 지식 평준화는 선진 국가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대중의 지식을 고도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은 바로 다양한 언어 지식을 체계화하여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고 이를 웹 기반에서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다. 규범은 사전 편찬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전 국민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사전을 통해 불편함이 없이 어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어문학자들이 알아야 할 지식의 영역까지 요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문 규범의 기계화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글쓰기의 불편함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의 지식과 정보 통합 능력을 인터넷을 통해 협업함으로써 중간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지식 생산을 고도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의 정보 생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비판적 관점에서 머물러서 있지 말고 대중의 지식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대중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미래를 만들어 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지식 생산과 관리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²¹

3. 쉽고 다양한 방언을 버린 댕가

지역어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어 중 상당수가 문화적으로 강력하며 공격적이고 부가가치의 생산이 높은 대도시의 언어 즉 표준

²¹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키식 국민형사전 편찬 사업이 이러한 관점에서 2008년 필자가 제안한 결과의 산물이다. 하루빨리 개방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이 사업의 주체를 정부 기관이 관장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 학술 단체로 이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의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국민들의 비판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민간 기관이나 단체나 사업자에게 이양할 것을 권한다.

어에 밀리고 있다. 강력한 권력을 지닌 공중파 방송미디어에서는 노골적으로 지역어를 표준어의 하위 언어로 취급하면서 표준어 사용을 권장하거나 혹은 증장하고 있다.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지역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하도 있으며 자기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이동하게 되면 더욱더 표준어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지역어의 소멸이 동물 또는 식물종의 소멸과 같이 자원의 고갈에 견줄 수 있는 문화의 소멸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어휘, 특이한 발음과 성조, 문장구조)에는 인간의 경험과 세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대표해주는 것들이 있다.

그 예로써 부산 지역에서 쓰는 ‘딸’에는 기존의 의미 외에도 부산에서만 통용되는 ‘처녀 혹은 아가씨’의 의미가 첨가되어 있다. 또한 전라도의 어휘 중에 ‘권이 있다 없다’라는 말의 ‘권’을 예로 들 수 있다. 첫눈에 어느 한 곳 흠잡을 곳 없이 아주 예쁜 얼굴이지만 ‘권’이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질린다는 뜻이고, 첫눈에 에이 하면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못난 얼굴이지만 ‘권’이 있다면 보면 볼수록 예뻐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많은 지역어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사라져 갔다. 이런 지역어는 국가적인 선언이나 민속적 관점에 의해 인위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이들 언어사용자들의 선택결과에 따라 존속하거나 사라져갔던 것이다. 모든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에서 동등하며 지역어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지역어는 언제든지 표준어로 격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언어는 전반적으로 사용하거나 폐기되는 사회의 도구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운명은 사회·정치 환경보다도 세력 혹은 권력관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어는 권력을 쟁취하는 언어인 것이지 지역에 관계없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통어(공통어)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매스 미디어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표준어를 제1의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지역어는 ‘빠른 속도로 고요한 절망적 자살’²²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지역어는 육지의 지역어와 달리 매우 특별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역사의 격변과 차별과 매스 미디어에 의해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살률이 높아지자 그에 따라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어떤 지역의 대부분 아이들이 더 이상 지역어를 배우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언어의 마지막 사용자가 죽게 되면 그 지역어는 마침내 소멸되고 만다.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표준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억압하고 표준어라는 언어공동체에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역어의 소멸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나아가 지역어 공동체 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역어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경향이 증가하면, 지역어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마저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공동체에서도 지역어를 은밀하게 사용함으로써 지역적이며 혈연적인 문화를 존속시키려는 의지도 한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강력한 유대의식이 잠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어는 지역공동체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화적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부산의 사직구장에서 노골적으로 ‘썰리라’ 등의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권력지향성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부산의 지역어는 정체성의 강한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표준어 제정 과정과 배경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급격한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먼저 의사소통의 수단과 방식이 달라졌다.

²² 엘리 제닉·스티븐 툴민 지음 석기영 옮김,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 217쪽, 이제이북스.

20세기 초 대다수 조선인들을 지배하던 한문, 한자에 의한 문자 소통 방식이, 소위 ‘국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일제의 근대화 과정과 일치된 문자 개혁과 표준화 작업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는데, 특히 새로운 매체와 매체 언어에 의한 혁신적인 변화가 문자 개혁과 표준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어 온 새로운 활자 매체와 소리의 제작 기술이 개량되면서 신문과 잡지의 대량 보급과 라디오 공중파의 보급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매체 변화와 더불어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 문자의 사소통 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폭넓은 계층에서 한글이 자연스럽게 유통되면서 한문을 계승하던 집단은 급격한 몰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신교육 세대에겐 새로운 문자 소통의 또다른 우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일본어였다. 한문이 차지하던 자리에 일본어와 일부 영어라는 소통 방식이 대체 수단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글 사용의 확산은 근대화라는 환영과 계몽이라는 방식으로 견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한글의 문자로서의 우수성이 여기서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1896년 「독립신문」이 간행되고 1903년에는 최초로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1907년에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이 간행되는 등, 1910년대부터 시작된 보통학교 교육이 확산되었다. 학교를 통한 글읽기와 글쓰기는 ‘한문’ 또는 ‘한문 현토체’에서 ‘한글’로 새로운 변화를 겪으며 급속도로 민중으로 파급되었다. 1927년에는 경성방송국JODK의 방송이 시작되는 등 최단 시일 내에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와 사회 소통 방식과 구조가 충격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표준어를 채택하는 과정은 정서법의 확정 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곧 갑오개혁 이후 1894년 11월 21일 고종 31년 칙령 제1호에서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법률칙령총이국문위본)…….’이라고 하여 한글을 공용어

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1895년 5월 8일 이 칙령이 공포될 때 이 조항은 ‘법률칙은 다 국문으로서 본을 쓰고…….’라고 하여 국한문으로 번역되었다. 군국기무처에서 의정부 이하 각 관청의 편제와 직무를 근대 정부 조직으로 개편할 때 학부學部를 신설하여 국문(한글) 철자를 관장하게 하여 ‘국문’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 칙령은 한글을 공식적인 나라 글자로 인정한 이른바 문자 혁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 변용은 대한 제국 몰락 이후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의 철저한 식민화의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구 근대화의 환영으로 촉발된 유교적 한문 전통 사회의 몰락과 동시에 계몽적 표상으로서 전통적 글쓰기의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우에다 가쓰토上田万年(1867~1937)는 ‘국어’와 ‘국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관점에서, 국어 정책을 추진하던 주체였던 총독부는 학부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언론, 출판, 교육계에 ‘언문일치’와 표기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개화기에 들어 국한문 혼용체가 세력을 얻게 되고 1885년 신교육 제도가 실시되면서 우리말 교육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신교육 제도의 도입으로 교과서 제작과 그에 따른 국어 교육이 필요해지자, 자연스럽게 국어를 대표하는 ‘표준어’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갑오개혁(1894년) 이후 개혁의 일환으로 ‘언문’이 ‘국문’으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사회 통합 방식인 ‘국어’ 정책과 그 변화의 축을 같이하고 있었다. 1907년(융희 1년)에 국문연구소가 개설되어 1907년 9월 16일부터 1909년 3월 3일까지 위원들의 의정안 ‘국문연구의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나라가 망하면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1912년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어로 함”이라는 규정이 처음으로 발표되고, 뒤이어 제2, 제3의 ‘언문철자법’이 발표된 후, 1933년에 비로소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최종으로 확정되었다. 이 안을 근거로 하여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표준어의 기반이 확정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기 이전,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의 국문 연구소의 활동이나 1920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어사전』 간행 사업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은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수행했던 국어(일본어) 정책을 그대로 조선에 이입시키려 했던 것이다. ‘동경 아마노테선山水線 안의 동경 말씨’를 일본의 표준어로 정한다는 수도 기반의 어문 정책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이후 아마노테선 안의 동경 말씨를 표준어로 규정하였으나, 동경시 규모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1949년 이후에는 NHK 방송 언어가 주도하는 동경 공통어(일본인 다수가 사용하는 말) 정책으로 일대 전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근대적인 표준어 사정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곧바로 표준어를 사정하기 위해 대대적인 언어 지표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 그 성과를 모아 약 32권의 일본어대사전을 편찬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교육용 공통어를 선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20세기 벽두에서부터 ‘국어’의 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이웃 일본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형편이 달랐다. 일본은 지방 분권이 와해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은 상황에서 내부 불만 세력인 지방의 무사들을 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내부적인 갈등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동시에 조선과 대만 등의 식민 국가를 발판으로 제국주의적 기반을 착실하게 닦게 되었다. 그러한 때에 ‘국가’나 ‘민족’의 개념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국어’ 정책에 있어 표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

던 것이다. 그리고 동경의 야마노테선 내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씨를 일본어의 표준으로 삼는 전략은 우리나라 선각자들에게 타자적인 모습으로 반영됨으로써 한문 문화권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우리 ‘국어’도 일본으로부터의 민족주의적 저항의 방식으로 또는 계몽주의적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국내에 정착하게 되었다.

1) 표준어 제정 찬반론

1933년 당시에 표준어 제정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표준어를 ‘서울말’을 중심으로 정하자는 입장과 ‘공통어’를 중심으로 하자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서울 중심의 표준어를 주장한 견해를 살펴보자. 정렬모는 “방언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것이 표준어가 되는 것이니 어느 말이든지 대개 서울말이 표준어가 된다.”라고 하여 표준어의 근거를 서울로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조선어학회(1933)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2항), 조선어학회(1934)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표준말을 대개 그 나라 수부의 말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병제는 “대개는 그 나라의 수부^{수부} 곧 서울말이 표준말로 되고, 그 이외의 말은 모두 방언^{방언}으로 치게 된다.”라고 하여 표준어의 대상 지역을 정치, 경제의 중심 지역인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하기를 주장하였다.

공통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찮았다. 정렬모는 “본시 표준어라는 것은 근거를 수부에 두기는 하나 실상은 교양 있는 전국민의 공통어를 이르게 되는 것이올시다.”라고 하였고, 이윤희는 “만사람에게 공통되는 즉 어느 계급에만 속해서는 못 쓴다는 그러한 것이라야 (중략) 지리적으로는 시골말과 서울말의 가운데에서 추릴 것.”이라 하였다. 홍기문은 수도

의 변경 가능성과 수도말이 아닌 표준어의 예를 들면서, 수도말의 사용 범위가 반드시 다른 지방말의 사용 범위보다 넓은 것도 아니고 또 수도말의 모든 점이 지방말보다 항상 우수한 것도 아님을 주장하였다. 또한 고재휴는 “그 지방의 말을 지방말이라 하여 수천년간 혀에 구든 그 어음과 어법을 일시에 탈거한다는 것은 지방말은 너무 천시하고 서울말을 무조건 승양하는 자이다. 될 수가 있다면 경성말을 표준어로 하면서 지방말을 적의취사하여 남북선말을 살리는 동시에 경성말이던지 지방말이던지 무용의 사어 고어 방언은 수정 혹은 버리고 정당한 전 지방을 통하여 통일적인 말로 표준어로 삼고 보급시켜야 한다. (중략) 경성말도 한 방언이요 기타 지방말도 방언임으로 전 지방말을 엄정취사하여 가장 통일적 합리적인 표준어를 세워서 조선말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한국어는 여러 방언이 모여서 성립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재휴의 “경성말도 한 방언이요 기타 지방말도 방언임으로 전 지방말을 엄정취사하여 가장 통일적 합리적인 표준어를 세워서 조선말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논점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홍기문의 관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곧 수도의 변경 가능성과 수도말이 아닌 표준어의 예를 들면서, “수도말의 사용 범위가 반드시 다른 지방말의 사용 범위보다 넓은 것도 아니고 또 수도말의 모든 점이 지방말보다 항상 우수한 것도 아니다.”라는 기술은 오늘날의 방언학의 개념과 상통한다. 그리고 수도가 확장되는 경우나 이전을 하는 현실을 예견한 견해이다.

1934년에 발간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해설』에 따르면 당시 ‘서울말’의 성격을 “한 나라의 말 가운데 곳을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이 있나니, 그 가운데 한글대의 말을 표준말로 정하고 그 밖의 말들은 모두 방언方言이 된다. 어느 나라든지 표준말을 대개 그 나라 수부의 말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수부는 한 나라의 중앙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며, 또 물자와

인중이 집산하는 대이므로, 그 곳의 언어는 모든 방언의 혼성이요 중화이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서울 토박이 말’이 아니라 ‘서울에서 쓰이는 전국적인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수도의 규모가 커지거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사정이 꼭 같다. 193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표준어 규범에 따라 학교 교육을 시행한 결과 서울 방언이 남한 전역의 공통어로 굳게 자리를 잡았다. 동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도시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누가 토박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다. 전체 서울 시민 가운데 교양 있는 순수 토박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표준어를 규정한 ‘표준어 규정’의 총론 2항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로 규정하였다. 그 이후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는 표준말을 사정하였으며, 다시 1988년 문교부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표준어 규정’ 총칙 제1항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다.

2) 1933년 표준어 규정

: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1988년 표준어 규정

: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933년 안과 1988년 안의 표준어 규정 총칙을 몇 가지 맥락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이 ‘표준말’이나 ‘표준어’이냐의 차이, 둘째, 기준 시점이 ‘현재’인가와 ‘현대’인가의 차이, 셋째, 대상의 사회적 계층이 ‘중류 사회’인가와 ‘교양 있는 사람들’인가의 차이가 있으며, 넷째, 대상 지역으로 ‘서울말’은 두 안이 일치한다.

먼저 ‘표준말’은 마치 입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입말과 글말을 두루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표준어’로 개정한 것 같다. 그러나 이 ‘표준어(standard language)’라는 용어는 ‘비표준어’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 총칙 제1항의 규정에서 제외되는 일상어는 모두 비표준어로 규정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은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어 둔다.

기준 시점의 문제에서 낱말의 어휘적 의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재→현대’로 수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과연 ‘현대’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대상인 사회적 계층 문제에서는 ‘중류 사회’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이라는 표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중류 사회’를 ‘교양 있는 사람들’로 수정하였으나 전자의 중류 사회란 어느 사회 계층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며, 역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계층적 정의 또한 그 범주의 불분명함은 물론이거니와 이 계층에서 제외되는 서울 사람들을 포함하여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교양이 없는 사람들’로 비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여 위험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땃말두레’에서 위험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의 언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언어 인권론을 주장한 사례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88년 개정안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에서 ‘두루 쓰는’이라는 대목은 바로 일본의 공통어적